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한국의 안보에 관한 정책적 대안 연구

이병철
행정학과

〈요 약〉

새로운 국제질서를 맞이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북한의 체제위기의식을 가져왔으며 그 결과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개발과 보유라는 극단적 고단위처방을 강구케 만들었다. 현재 한국안보에 있어 북한의 핵무기개발과 보유의지는 대단히 중요한 정치적 변수로 떠 오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해법을 찾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를 다각적인 시각에서 분석해보고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새로운 질서에 따른 한국의 안보정책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그런 다음 북한 핵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북한의 핵카드가 가지는 정책적 의미를 고찰해 보고 이에 입각해 한국의 북한 핵카드에 대한 대응전략을 정책좌표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분석이 주로 사용되었다.

연구의 결과에 따른 정책대안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핵개발과 보유에 대한 동기적 요인을 제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북한이 핵문제해결에 성실히 임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설 수만 있다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독일식 흡수통일방안의 논의나 팀스피리트훈련등은 북한 핵문제의 진전상황을 주시하면서 탄력적이고 전향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남북대화등을 통해 상호신뢰기반을 조성토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고립적이고 폐쇄적인 사고를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전환시키기 위해선 남북한간 신뢰감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남북대화형식이건 특사교환이건 정상회담형태이건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한국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핵무기 개발과 보유가 남북문제해결과 북한체제유지를 위해 별 효험이 없다는 점을 북한당국이 주시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이러한 유화적 정책을 우선적으로 하여 북한의 핵무기개발과 보유에 대한 동기적 요인을 제거시키고 신뢰회복노력을 집중시키는 일방, 북한이 이러한 한국의 의도를 악용할 때를 대비한 대안으로서 종전까지의 회피전략을 과감히 벗어난 보다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구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국제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유화적 제스처와 적극적 대응전략을 병행

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보유를 위한 노력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진력해야 하되 국제적 신질서 아래에서도 한국과 북한은 같은 민족이며 2000년대 통일한국의 위업을 이끌어 나갈 주체라는 자아의식을 버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2000년대에는 근대화된 중국과 재무장된 일본이 통일한국의 제일의 가상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 안목에서 통일한국의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북한핵의 해결방안 모색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Study of South Korea's Security Policies Against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 in North Korea

Lee, Byung Chul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Abstract>

In the presence of new international order, the domestic and foreign national security environments have been changing drastically. These changes affect the strategy for defense of North Korea. It continuously stimulates the plan for holding nuclear weapons for North Korea. The development plan and holding will for nuclear weapon in North Korea become a critical point for South Korea's security.

This paper is designed for finding possible policy solutions against North Korea's strategy. The solu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remove immediately North Korea's intention for developing nuclear weapon. Second, mutual confidence between two countries should develop through increasing opportunities for South-North dialogue, and summit conference. Third, in addition to these indirect policies for reducing North Korea's intent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 direct measure for solving North Korea's moral hazard as well.

In conclus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take an initiative for the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by reducing the possibility of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 in North Korea. Furthermore, South Korea's strategy against that of North Korea should be built by taking a consideration of new international order among other giant countries such as Japan and China after the unification.

제1장 글을 시작하며

새로운 국제질서를 맞이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종전까지의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따른 한국, 미국, 일본체제와 북한, 소련, 중국체제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 종전의 세력균형이 무너지게 되고 이에 따른 북한의 체제위기에 대한 인식은 다른 어느때보다 심각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위기인식의 고조는 핵무기 개발과 보유라는 극단적 고단위처방으로 우리앞에 다가서고 있다.

현재 한국안보에 있어 북한의 핵무기개발과 보유의지는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북한이 과연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인지? 또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개발을 하고 보유를 할것인가? 그리고 개발을 해서 보유를 했다면 어떻게 핵카드를 자신의 체제유지를 위해 활용할 것이고 어떠한 상황과 여건하에서 사용할 것인가? 하는 등의 문제는 한국의 안보적 차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 할 대목인 것이다. 그만큼 북한의 핵무기개발과 보유의지는 한국안보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안보에 긴요한 변수로 작동될 것이며 그러한 까닭에 이에 대한 관심이 전세계적으로 점증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한국의 입장에서 찾아보려고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를 다각적인 시각에서 분석해 보고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새로운 질서에 따른 한국의 안보정책의 방향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그 다음 북한 핵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북한의 핵카드가 가지는 정책적 의미를 고찰해 보고 이에 입각해 한국의 북한 핵카드에 대한 대응전략을 정책좌표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될 연구방법은 국내·외에서 발간된 본 논제와 관련된 문헌들과 시사자료들을 분석하는 문헌분석(literature survey)에 크게 의존할 것이며 가능한 한 북한의 핵문제를 한국의 안보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그 해법을 찾아 정책대안을 제시하려는 선으로 연구범위를 국한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연구목적 및 범위 이외의 영역에서 한계를 지니게 됨을 명시하는 바이다.

제2장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변화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에 의해 실시된 글라디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로 표현되는 신사고(新思考)로 인해 사회주의권의 몰락은 가시화되었다. 구소련이 붕괴되고 그의 주변맹방들도 공산주의체제에 종언을 고하였다.¹⁾

1) 냉전적 구도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불러 일으킨 것은 고르바초프였다. 그는 종전의 스탈린식 사회주의, 그리고 스탈린의 유업을 고스란히 이어 받았던 브레즈네프적 사회주의가 더 이상 소련사회를 이끌고 나갈 수 없음을 인지하고 위로부터의 혁명을 통해 새로운 소련의 사회주의화를 이루어 보려는 시도에서 부분적인 개방, 개혁정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변화의 조짐은 지금까지 억눌려 왔던 인민의 욕구를 일시에 분출시키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그 결과 구소련체제의 붕괴라는 역사상 미증유의 대사건을 연출하게 되었다. 이에 이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와 동시에 구소련의 맹방들이 동유럽국가들이 위로부터의 개혁에 의해 그리고 일부는 밑으로부터의 혁명에 의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새로운 국제질서를 낳게 되었다.

중전의 미국과 소련을 두핵으로 하는 양극체제(bipolar system)의 냉전구도에서 정치, 외교, 군사분야에서는 미국의 독주체제(unipolar system)로 그리고 경제분야에서는 미국, 일본, EC 등의 다극체제(multipolar system)로 바뀌어지고 있다.²⁾ 더욱이 경제적 면에서 새로운 신흥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등은 경제적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미국의 경제력 퇴조의 진공을 메우고³⁾ 정치, 군사, 외교의 빈틈을 비집고 들어오기 위해 이미 갖추어진 경제력을 기반으로 하여 군사력을 강화하고 이를 배경으로 하여 정치, 외교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노력을 경주하는 등⁴⁾ 그야말로 새로운 국제질서의 전환기를 맞고 있으며 정치이데올로기적 갈등은 퇴조하고 이제는 국가이익과 민족이익을 앞세우는 신보수주의적 성향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전쟁으로 대변되는 국가간의 경제전쟁이 가열되고 있다.⁶⁾

해 사회주의체제와 결별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Karen Dawisha, *Eastern Europe, Gorbachev, and Reform: The Great Challen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pp.191-192.

Moshe Lewin, "Perestroika: A New Historical Stage",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42, No. 2 (Spring 1989), pp.299-306.

Padama Desai, *Perestroika in Perspectiv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p.89.

Ian Craib, *Modern Social Theory: From Parsons to Habermas* (London: Wheatsheaf, 1992), p.149.

고르바초프가 천명한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원할 경우 다음의 문헌을 참고할 수 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사회주의사상과 혁명적 페레스트로이카", 프라우다, 1989. 11. 26., 『사상과 정책』, 제7권 제1호 (서울:경향신문사, 1990).

Mikhail Gorbachev, *Perestroika: New Thinking for Our Country and the World* (New York: Harper and Row, 1987).

_____, "Speech at the Congress of the RSFSR People's Deputies, May 24, 1990", *Pravda*, May 25, 1990.

Abel Aganbegyan, *Inside Perestroika: The Future of the Soviet Economy* (New York: Perennial Library, 1989).

Jerry Hough, *Russia and The West: Gorbachev and the Politics of Reform*, New 2nd Edition (New York: A Touchstone Book, 1990).

2) 박재규, "새로운 세계질서와 한반도의 위상", 『전환기의 위상』 (서울:나남, 1992), 22면.

3) 세계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950년대의 40%에서 1960년대 26%, 그리고 1987년대의 23%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나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게리트 공(Gerrit W. Gong), "신데탕트시대의 미국의 세계전략", 『신데탕트와 한반도안보』, (서울:대영사, 1990), 26면.

따라서 국제사회의 경찰을 자임하며 리더십을 행사하여 왔던 미국은 80년대 후반이후 '신교섭주의' 정책아래 역할재조정을 시도하고 있다.

Paul Kennedy, *Preparing for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Random House, 1993) 참고.

4) 박재규, 『앞의 책』, 7-8면.

Samuel P. Huntington, "America's Changing Strategic Interest", *Survival*, (Jan/Feb, 1991), pp.3-17.

5) 국제전략연구소(IISS)는 1993년 5월 국제전략보고서를 발표하면서 1992년을 민족주의자들에 의해 야만적인 도전이 자행된 '혼돈의 한 해'였다고 규정했다. 또 민족갈등, 기아, 국가간 무역전쟁 등 문제를 해결코자 했던 UN, EC, GATT등 국제기구의 시도가 실패하는 한계를 목도하는 한 해였다고 IISS는 규정한다.

최평길, 『미리보는 코리아 2000』, (서울:도서출판 장원, 1993), 18-19면에서 재인용.

김부기, "페레스트로이카의 배경과 과제", 『국제정치논총』, 제29집 제2호 (1989), 197-205면.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는 한반도를 위시한 동북아지역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다.

중전까지 한반도에는 지정학적인 측면과 세계전략적 관점에서 4대 열강의 각축장이었다. 동(東)으로는 일본, 서(西)로는 중국, 남(南)으로는 미국, 북(北)으로는 소련이 서로의 이념적 명분과 세계전략적 헤게모니의 우위를 쟁취하기 위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여 치열한 정치, 외교, 군사적 공방을 40여년이 넘게 지속해 왔다. 그러나 이에 앞서서 지적했듯이 새로운 국제질서의 흐름은 한반도에도 영향을 끼쳐 구소련의 붕괴로 러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입김은 그만큼 위축되어질 수 밖에 없으며 미국 역시 경제적 위축으로 인해 중전까지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시킬 수 없는 입장에 처해지고 있는 반면, 중국과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보다 강화시키는 상반된 입장이 나타나게 되었다.

일본은 이미 언급했듯 경제력을 기반으로⁷⁾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고 있으며 러시아와 영토분쟁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북방 4개도시의 반환등을 요구하고 나섬으로써 정치, 외교적인 위상제고에 힘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적 면에서는 UN 평화유지기구(PKO)에 참가하여 캄보디아등에 UN 평화유지군(PKF)을 파견함과 동시에 미국과 공동으로 미사일방어요격시스템계획참여, 차세대전투기개발계획참여등을 통해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고 있으며 GNP의 1%를 상회하는 국방예산을 통해 재래전력을 극대화시키려 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프랑스를 통해 핵무기제조원료인 플루토늄을 수입해 핵개발의 일면을 드러냄으로서 일본의 궁극적 군사목표인 핵전력 보유를 향한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중국 역시 등소평집권이후 실용주의노선을 채택함으로써 정부주도의 개방, 개혁정책이 활기차게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경제면에서 중국의 수출과 GNP는 높은 성장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정치, 외교적 면에서는 대만을 축출하고 이미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되었으며 군사적 면에서는 재래전력의 증강과⁸⁾ 핵전력의 증대를 통해 미국과 러시아의

6) 세계를 지배하는 힘의 개념이 지금까지는 무력적인 물리적 강제력에 의해서 규정되었으나 지금에 와서는 무역을 중심으로한 경제력의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착상의 전환이 새로운 국제질서의 중요가치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관한 이론적 도움은 아래에 제시한 책이나 논문들을 참고할 수 있다.

Richard Rosecrance, *The Rise of the Trading State* (New York: Basic Books, Inc., 1986).

_____ and Arthur Stein, "Interdependence: Myth or Reality", *World Politics* (July 1973).

Michael Stewart, *The Age of Interdependence* (Cambridge, Mass.: MIT University Press, 1984).

Kenneth Waltz, "The Myth of National Interdependence" in Charles Kindleberger (ed.), *The International Corporation* (Cambridge, Mass.: MIT University Press, 1970).

7) 2차세계대전 이후의 냉전시대에 미국은 대(對) 소련방어를 위한 세계전략구도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독일과 일본의 정치체제를 민주화시키는 대신 상당한 정도로 경제적 부흥을 위한 양국의 노력을 허용, 지원했었다.

Michael Schaller, *The American Occupation of Japa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미국이 가지는 일본의 정치적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통상 무조건 항복을 한 국가들이 누릴 수 없는 완전한 경제적 자율성을 일본에게 미국은 인정할 수 밖에 없었으며 미국과 소련의 대치라는 냉전적 구조만 없었다면 일본의 경제발전은 미국에 의해 어떤 식으로든 저지되어졌을 것이라는 프리드만(George Friedman)의 주장도 이와같은 입장을 강변해 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George Friedman and Meredith Lebard, *The Coming War with Japan*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1), p. 3.

퇴조하는 군사력의 공백을 메워가는 야심찬 의욕을 내 보이고 있다.

이러한 근래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각 주변열강들의 입장을 살펴 보았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인해 냉전체제가 붕괴되어 러시아의 영향력이 퇴조되고 유일강대국인 미국 역시 최근의 경제침체로 인해 한반도에서 정치, 외교, 군사적인 면에서 종전의 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지금까지의 4강에 의한 세력균형관계가 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중국의 근대화와 일본의 정치, 군사대국화의 시도는 러시아와 미국의 퇴조로 기인된 한반도의 힘의 진공을 메우려는 새로운 세력으로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종전까지의 냉전구도에 따른 정치이념적 갈등에 따른 남북한 관계가 새로운 국제질서의 논리에 따라 재편되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제3장 신질서에 따른 한국의 안보정책의 방향

한국은 종전까지 미국과의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하여 한국의 안보를 지탱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이 없는 한국안보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었고 현금까지도 그것은 엄연한 현실이며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의 종전 입장에서 볼때 한반도상의 미국의 존재는 한국안보의 방패로서의 의미를 크게 지닌다고 평가해 왔다.⁸⁾ 미국이 존재하는 한 북으로부터의 침략의욕도 상쇄시킬 수 있고 중국과 소련에 대해서도 미국의 확고한 대한방위공약은 상징적으로 한국안보의 보루로써의 의미를 제공해 주는 일면이 없지 않았다. 미국의 핵우산아래에서 한국은 가용한 자원의 상당량을 경제, 사회개발비용등으로 충당하여 사용할 수 있었다.

물론 미국의 존재로 인해 자주주권의 틀이 영향을 받고 흐트러지는 일면도 없지 않았고 민족자존심에 멩이드는 일면도 있었고 미국경제에의 종속에 따른 만만치 않은 반발도 있었다. 그리고 미국의 세계전략의 일환으로 한반도의 전진기지화에 따른 불이익도 감내해야만 했던 면도 없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미국의 종전 입장에서 볼때는 한반도의 미국화는 소련과 공산화된 중국의 대륙세를 견제, 봉쇄시켜 서태평양의 재해권장악으로 인한 미국의 국가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고 일본의 전진기지화 또는 중립완충지역(buffer zone)으로 한반도를 전략화시킴으로서 미국의 국익과 크게 관련된 일본의 방위와 일본의 재무장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익을 동시에 얻어낼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더우기 한국의 경제적 성공은 미국의 자본시장개척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라는 부가적인 산물도 얻어낼 수 있다는 잇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양국의 시기에 따른 국가이익간의 맞물림에 의해 다소의 차이는 있었지만 이러한 양국의 이

8) 예를 들어 중국의 해군은 지속적인 해군력 증강에 힘입어 이미 제한된 능력이기는 하나 대양(大洋)에서의 작전능력(遠洋作戰能力)을 갖추고 있다.

마코토 모모이, "아시아-태평양 안보환경과 일본의 시각", 『탈냉전시대의 한미관계』, (서울:한국국방연구원, 1992), 35면.

9) 아시아에서의 미군주둔은 단순히 소련군사력과 균형을 유지한다는 의미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미군주둔을 그들 방위능력 이상의 위협에 대한 보호막으로 생각해 오고 있다. 로버트 마틴(Robert Martin), "세계적 신데탕트:역사적 시각", 『신데탕트와 한반도안보』, (서울:대영사, 1990), 17면.

해관계는 한반도에서 어느정도 부합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런 맥락에서 한국의 안보정책의 골간을 형성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국제질서아래에서는 앞에 설정된 한·미간의 안보전략의 가설적 전제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한국의 입장에서 볼때 북으로부터의 침략의 위협강도가 현저히 감소되었지 않느냐 하는 시각이 근래에 들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과의 경제경쟁에서 한국이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을뿐 아니라 정치적 면에서도 정통성을 지닌 문민정부가 들어섬으로써 북한체제보다 우위에 서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종전까지 북한의 후견인 노릇을 해왔던 러시아와 중국과 수교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국내사정으로 또 중국은 자신들의 근대화를 위해 한반도의 안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등이 북한의 남침가능성을 그만큼 낮게 평가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종전의 우방이던 미국과 일본에 대한 시각의 변화이다. 이제 미국과 일본도 이념적 갈등의 종식에 의해 냉전체제가 무너진 지금, 그리고 새로운 대체이데올로기로 경제적 현안이 대두되고 국가이익우선주의라는 신질서가치가 대두된 이상 우리가 상대해야 할 협력적 경쟁자라는 위상의 전환등을 들 수 있다.

이미 미국은 UR, 덤핑제소 등을 통해 그리고 일본은 기술이전거부, 일본자본의 한국상륙, 일본의 배후시장으로 한국을 개척코자 하는 의도 등을 통해¹⁰⁾ 한국에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고 있는 실정이다.

다음 미국의 입장에서 볼때 구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근대화를 통한 부분적인 사회주의노선의 포기 그리고 시장경제로의 진입등은 한국안보에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며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과 김정일에 대한 권력세습 그리고 그에 따른 체제동요등과 같은 북한의 국내사정은 한국에 대한 군사적 도발가능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중요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다가 한국의 경제발전, 정치, 외교적 역량의 증대등으로 인해 한국의 내적 안보환경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함으로써 한국의 안보는 이전보다 여유를 갖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¹¹⁾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미국은 한국안보의 일익을 담당하는 주한미군의 점진적 철수와 주한미군 주둔비용부담 등을 요구하는 한편 한국의 경제시장개방을 통한 미국경제활로의 모색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그와 병행해 안보적 위협이 감소된 한반도지역과 동북아의 방위를 일본에 떠맡김으로써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신보수주의적 방위전략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에 따른 이러한 한국과 미국의 안보시각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한국의 안보에 관한 새로운 가설적 전제를 낳게 하였다.

첫째, 종전까지 북한을 제일의 가상적으로 하던 안보전략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점

10) 미국에서 조차 세계경제장악과 일본의 기술헤게모니체제가 미국안보에 최대위협이라고 보는 미국인들이 점차 늘고 있다.

차영구, 김창수, "탈냉전시대의 한·미안보관계:한국측 시각", 『앞의 책』, 한국국방연구원, 1992, 77면.

11) 이와같은 논리로 새로운 세계질서하에서 전쟁의 위협이 급격하게 감소했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러한 사고가 한반도 문제에도 적용되어 정책화 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와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크라우트하머(Charles Krauthammer)의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대량살상무기-예를 들면 핵무기 등-를 갖춘 호전적인 작은 무장국가(Weapon State)들의 등장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전쟁의 위협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대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Charles Krauthammer, "The Unipolar Moment", *Foreign Affairs*, Vol.70, No.1 (1991), pp.23-33.

이다. 즉, 북한의 위협이 상대적으로 감소된 반면 새로 근대화의 길목에 들어선 중국과 정치, 군사대국화를 꿈꾸고 있는 일본의 위협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2000년대를 내다 보는 장기방위전략에서 볼때는 한반도의 통일을 가정해 볼 수 있는데 이때 가장 커다란 가상적은 일본, 중국, 러시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때 종전의 안보정책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다.

둘째, 미국과의 연계속에서 구상된 안보방위전략의 재검토이다.

주한미군은 어느 시기엔가는 한반도에서 철수할 수 밖에 없으며 단지 그 철수시기는 한반도의 안보상황에 따라 한국과 미국정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일이나 철수를 한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자주적 안보를 위해서도 그러한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신보수주의화되는 세계방위전략에 대처할 수 있기 위해서도 그러한 방향의 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영향력과 방위력이 물러난 이후의 한반도안보에 대한 구상이 구체화되어야 하며 상대적으로 중국과 일본, 러시아간의 새로운 세력균형에 부합되는 독자적인 방위전략이 구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째, 지금까지 한국의 안보정책은 주로 한반도내에 국한되는 외교, 군사적 측면에 치중된 감이 있었는데 이러한 편향화된 정책방향에서 대외지향적이면서 정치, 경제적인 측면으로 무게의 중심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을 모색하여야 된다는 점이다. 이미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위한 무한경쟁의 시대로 새로운 국제질서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국가이익을 둘러싸고 걸프전이 이루어졌고¹²⁾ 민족의 이해에 따라 구소련의 구성공화국간의 내전과 유고내전등이 일어 나고 있으며 국가간, 경제블록간 포성없는 무역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미국과 일본, EC 등의 경제개방압력이 가중되고 있으며 수출시장에서의 각축이 가열되고 있다. 자원빈약국으로 긴 해로(sea lane)를 통해 경제를 영위해야 하는 한국으로는 국가안보에 있어 군사면 못지않게 대외지향화되어야 하며 정치, 경제적 면에도 관심을 집중해야 된다는 점이다.

제4장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한국의 안보정책구상

새로운 국제질서의 재편에 따른 한국의 안보시각은 첫째, 종전까지의 북한을 제일의 가상적으로 하던 안보전략의 변화 둘째, 종전의 미국과의 연계속에 구상된 안보방위전략에 대한 재검토 세째, 대외지향적이면서 외교, 군사뿐 아니라 정치, 경제면에 무게를 담은 균형화된 안보전략구상 등으로 집약해 볼 수 있다.

이것이 새로운 국제질서에 따른 한국의 안보시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이 정치, 외교, 군사도박으로 내놓고 있는 핵카드에 대한 정책적 의미를 분석하고 이에 입각해 한국의 대(對)북한핵정책에 대한 정책대안을 안보정책적 차원에서 구상하고자 한다.

제1절 북한 핵카드의 정책적 의미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조짐을 보이거나 개발해 냄으로써 그들에게 올 수 있는 긍정적인 정책적 급부는 다음과 같다.¹³⁾

12) 걸프전은 석유가 나오므로 서구열강의 이해관계가 일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윌리엄 J. 테일러, 마이클 메이저, "걸프전:한국을 위한 교훈", 『앞의 책』, 한국국방연구원, 1992, 88면.

첫째,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해 냈으므로 재래전력을 증강시키는 비용보다 싸게 한국에 대해 군사적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근거는 이미 남북간만에 냉정히 존재하는 경제력의 차이로 인해 재래전력의 경쟁에서는 곧 한국에 비교우위를 뺏길 수 밖에 없고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그 괴리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생각과 재래전력에 충당되는 비용의 일부만으로도 핵무기를 생산해 낼 수 있다면 비용, 편의 또는 비용, 효과면에서 핵무기개발이 훨씬 현실적으로 유리한 대안이라는 생각에서이다.

둘째, 일단 핵무기를 개발해 실전배치를 할 경우 한국과의 위상변화는 물론 동북아의 세력 균형에서 북한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이다.¹⁴⁾ 즉 한국, 미국, 일본과의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핵무기가 없을때보다 더 나은 입장에 설 수 있다는 점과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도 대한(韓)접근에 대한 견제와 북한에 대한 협조를 보다 더 용이하게 따낼 수 있다는 상징적 효과도 크다는 것이다. 핵무기개발이 단지 한국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시키는 것으로는 핵탄두를 목표지점까지 날라다주는 미사일개발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미 북한은 사정거리 1500Km로 동경, 오오사카, 북경, 블라디보스톡을 사정권으로 하는 '노동1호'를 개발 성공하였고 최근에는 보다 사정거리가 길고 정교한 '노동2호'를 이란에서 시험발사하려고 하고 있다는 외신도 있다. 이러한 미사일개발은 한국은 물론 일본과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도 위협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다.

셋째, 북한내부의 강경파의 입장을 강화시키고 이를 통해 김일성, 김정일권력세습체제를 공고화하여 기득권계층인 김일성, 김정일 추종세력들의 정권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핵카드를 사용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네째, 만약에 예상되는 미국과 한국연합군의 북침에 대비한 자결용이라는 생각이다. 즉 한미연합군이 북한체제의 와해에 임박해-김일성사후 북한내부의 내전가능성이나 김정일의 실각이나 군부쿠데타 또는 난민의 대량 남한으로의 유입사태등-북침을 감행할시에 한국의 심장부인 수도서울 등에 투하하여 한국의 전쟁수행능력을 극소화시킴과 동시에 한반도의 핵전으로 남북한 공멸하게 한다는 전략으로 한미연합군의 북침억지와 핵전억지력에 무게의 비중을 두면서도 최후에 순간 남북 같이 공멸하자는 자살전략이다.

다섯째, 핵무기를 개발해내지 못한다해도 일단 북한이 핵개발을 하고 있다는 사안자체가 주는 상대적 위협을 통해 한국, 미국, 일본과의 협상을 북한의 생각과 논리대로 끌고 갈수 있다는 생각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러한 생각이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성이 있는 추론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핵카드를 통해 미군핵부기철수¹⁵⁾, 틴스퍼리트훈련의 영구중

13) 북한의 핵개발 목적을 홍성후교수는 7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북한내부의 김일성 추종세력들의 정권연장 둘째, 중국, 소련의 대(對)북한 경시봉조 불식목적 셋째, 미국, 일본의 대(對)북한접근유도 넷째,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가중 다섯째, 핵병기 비밀판매를 통한 극적인 무역수지개선 여섯째, 남북대화에 있어서 북한의 주도권 획득목적 일곱째, 김일성, 김정일세습체제공고화 목적을 들고 있다.

홍성후, "북한지도자들의 성격분석과 북한의 핵개발정책", 『국방논집』, 제17호 (1992 봄), 99-102면.

14)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여 보유하게 되면 국제적으로 북한은 강대국과 약소국 모두의 주의를 끄는 위세있는 핵클럽의 일원이 되며 이 새로운 지위를 바탕으로 북한은 자유화를 촉구하는 외부적 압력을 극복하고 앞으로 오랜기간 전체주의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기존지휘부의 입장이 더욱 강화되고 강경파가 득세하게 되어 김정일의 정치권력승계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박동환, "앞의 논문", 284면.

15) 한반도의 핵무기에 대해 미국정부가 NCND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바로 그러한 정책으로 인해 미국이 여러형태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비축하고 있다는 사실은 세계적으로 공인되고 있다.

박동환, "남북군사협상과 한미안보협력의 방향", 『앞의 책』, 283면.

단, 주한미군철수, 선제핵공격불가공약, 북한체제의 인정,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미국과 일본과의 수교 등을 요구하는 것이다.

제2절 한국의 북한핵카드에 대한 대응전략구상

한국정부는 북한의 핵무기카드의 정책적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여야 하며 그러한 맥락에서 새로운 국제질서아래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의 방향에 따라 정책구상의 터전을 닦아야 한다.

1. 기존의 북한핵카드에 대한 대응전략들

우선 국내·외에서 지금까지 논의되고 강구되어진 북한핵카드에 대한 대응전략들을 강경입장, 온건입장, 중도입장으로 분류하여 고찰토록 한다.

(1) 강경입장

이 입장은 북한과의 정면대결을 전제로 한다. 종전까지의 북한에 대한 회피전략에서¹⁶⁾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자는 입장으로 최악의 경우 북한과의 일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내놓는 대안은 UN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군사적 제재로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기피하는 영변지역들을 공습하거나¹⁷⁾ 특공대를 침투시켜 폭파시키거나 이 보다는 약간 강도는 떨어지지만 공군력과 해군력으로 북한의 영공과 영해를 봉쇄해버리자는 것이다.¹⁸⁾ 그렇게 함으로써 핵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뿐 아니라 북한의 상도에 벗어난 불안난에 교훈을 줄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러한 입장에 대한 우려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핵무기공장등이 지하에 깊이 엄폐되었을 시에는 공습의 효과가 절감되고 특공대의 침투에 의한 폭파가 사실상 어렵고 둘째, 북한이 영변단지 이외에 다른 은폐된 핵무기개발시설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러한 노력이 의도와는 다른 상반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셋째, 폭파에 성공한다해도 핵낙진의 피해를 한국과 북한이 동시에 받게 되며 넷째, 한국의 안보가 직접적으로 불모가 됨으로써 제2의 한국전쟁발발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2) 온건입장

이 입장은 위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북한의 핵카드에 전향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이다.

16) 1968년에 일어난 김신조일당의 청와대기습사건, 프예블로호 납치사건, 1969년의 미국 EC-121기 격추사건, 울진, 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사건, 1976년의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그리고 1980년대 초의 버마 아웅산 폭발테러사건, 중후반의 김현희 KAL기 폭파테러사건 등에서 한국과 미국은 상응된 보복공격과 같은 적극적 대응을 못하고 문제를 비껴가는 식으로 미봉적인 해결을 해왔다.

17) 이라크의 핵무기개발계획은 1981년 바그다드 근교에 위치한 오시라크(Osiraq) 원자로에 대한 이스라엘공군의 기습적 공습으로 한때 거의 중단되었다.

Leonard S. Spector, *Going Nuclear* (Cambridge, Mass.: Ballinger, 1987), p.160.

18) 래리 닉쉬는 북한핵문제해결을 위한 정치, 외교적 노력이 실패로 끝나면 다음과 같은 보다 강력한 조치들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영변지역에 대한 제한적 정밀폭격 실시 둘째, UN승인하의 북한해상 및 공중봉쇄작전 셋째, UN승인하의 국제적 대(對) 북한 경제제재 넷째, 한반도 및 그 주변에 대한 미군병력의 증강배치 등이다.

래리 A. 닉쉬, "대북(對北) 최단기적 방안:미국의 시각", 『앞의 책』, 한국국방연구원, 1992, 67면.

이들은 북한을 절대로 한쪽 구석(corner)으로 몰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 체제를 건 도박을 하는 것도 그들 스스로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으로 하여금 체제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하면서 또 그들의 입장을 가능한 한 수용하면서 근본적인 핵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입장은 우선 북침의 위협을 북한체제가 느끼지 않도록 북한에 자극적인 틱스 퍼리트훈련등은 중단시키고 주한미군도 직접적인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이 부재한 한 점진적으로 철수시키며 한반도상의 미군전술핵도 철수시켜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거기에서다 남북대화 고위급상호방문등을 통해 남북한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한국, 미국, 일본의 북한핵 대응공조체제로 북한에 압력을 가하거나 UN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압력 등은 배제시켜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남북긴장완화와 신뢰조성을 통해 우호적 분위기를 만들고 이의 기반위에 고위급회담이나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입장이다.

이들은 한걸음 더 나아가 통일된 한국이 도래될 때 일본과 중국같은 주변의 열강들과 대등한 입장에 서기 위해서는 핵의 보유가 필요불가결한만치 북한의 핵무기개발 및 보유는 직접적인 한국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전향적인 발상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는 일면도 있다.

이들은 미국을 위시한 기존 핵보유국의 핵의 기득권화에 따른 반사적 이익향유에 따른 반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한반도의 비핵화정책에 핵주권상실 또는 자주외교의 포기라고 비판하고 있다.¹⁹⁾ 이들의 시각은 민족자존심과 자주국가로서의 면모를 갖기 위해선 핵주권을 우리 스스로 지켜내야 한다고 본다. 그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핵을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 대한 우려는 근본적으로 북한을 신뢰할 수 없다는 데서 발생한다.

첫째, 북한이 대남무력통일전략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선의라는 극히 불명료한 허상에 매달려 북한의 핵개발을 시의성있게 해결하지 못하고 시간을 끌게함으로써 북한이 핵개발을 완료하고 보유할 수 있는 여유를 주게되고 결과적으로 한국안보에 위협을 자초하게 되는 정책이라고 지적하는 것이다.

둘째, 긴장완화와 신뢰조성을 위해 틱스퍼리트훈련의 중단, 주한미군철수, 미군전술핵철수, 미국-북한, 일본-북한수교협상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북의 주장을 수용토록 하자는 것인데 오히려 이러한 수용은 북한의 빈사상태의 체제를 보다 공고화해주고 단기적으로 양보와 회피를 통해 현안인 핵문제를 해결할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보다 강한 호전적 정책에²⁰⁾ 봉착하게 됨으로 해서 남북관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게 될지 모른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세째, 통일이 되면 북한의 핵이 더 이상 한국에 위협적이지 못하며 남, 북의 공동의 핵으로

19) 제3세계 일각에서는 이러한 핵보유국의 견제, 제재를 세국주의 현상으로 보고 있다.

K. Subrahmanyam, "The Nuclear Issue and International Security",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Vol. 33, No. 2 (Feb 1977), pp.17-21.

Muchkund Dubey, "Deterrence Masks Superpower Hegemony", *op. cit.*; Vol. 41, No. 2 (Feb 1985), pp.28-30.

20) "경제력을 기반으로 하는 국력의 차이가 남북한간에 유례없이 커지고 있음을 아는 북한은 한국에 대해 군사력을 이용하려는 생각을 단념할 가능성도 있으나 북한이 오늘날의 불리한 상황을 단숨에 뒤집기 위해 무력에 호소할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면 북한에 대해 한국이 허를 보이는 것은 호전적 정책으로 급반전을 돕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伊豆見元, "일본의 국방정책과 동북아안보", 『앞의 책』, 88면.

변화되어 통일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에 대해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는 우려이다. 그 이유는 통일이 된다는 당위적 목표의 성취도 중요하지만 누구에 의해, 어떻게 통일이 되느냐 하는 것도 그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갖게 되면 그것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엄청난 직접적인 안보적 위협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북한당국이 합리적 정책결정을²¹⁾ 내리지 못할시는 민족적 재앙과 파국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3) 중도적 입장

이 입장은 강경입장과 온건입장의 중간에 서는 입장으로 비교적 국민적 지지의 폭이 넓은 것으로 사료된다.

우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나 보유를 한국안보의 직접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점에서는 강경노선과 그 맥을 같이 한다. 그리고 한미연합군에 의한 북한핵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나 UN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군사적 제재에는 반대한다는 점에서 온건노선과 그 맥을 같이한다. 이들은 이와같이 강경노선이나 온건노선이 내세우는 논리의 일부를 수용하면서 나름대로 중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북한의 핵개발저지를 위해 남북대화등을 통해 북한을 설득하고 미국, 북한간의 협상, 또는 한국, 북한간의 협상을 통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되 그것이 불가할시는 한국, 미국, 일본의 북한핵대응공조체제를 가동시키고 UN의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경제제재나 외교제재등의 비군사적 제재를 통해 북한에 핵개발조기의 압력을 행사하고 러시아나 중국 등에 외교, 정치채널을 통해 북한을 설득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한국안보를 담보로한 강경입장에서 비롯되는 위협과 그 위협의 강도를 약화시키고자 하는 온건입장에서 비롯되는 또다른 유형의 위협을 비껴 나갈 수 있다는데서 의미를 찾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입장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첫째, 시나리오상으로는 우선 남북대화나 미국-북한협상을 통해 북한을 설득하고 그것이 불가할시에 한국, 미국, 일본의 북한핵대응공조체제를 가동시키고 UN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비군사적 제재를 가하고 러시아, 중국채널을 통한 설득을 병행한다고 하지만 핵개발에 대한 체제안보적 입장에서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어느정도 효능이 있을지에 대해선 극히 미지수라는 것이다.

더우기 남북대화라는 것도 북한의 지연전술로 이용될 가능성도 있고 미국-북한협상은 한국을 이해당사자에서 제3자로 전락시킴으로 해서 한국의 안보와 관련된 결정에 한국이 참여할 수 없는 아이러니를 낳게되고 그 결과로 한국에 엄청난 또 다른 형태의 안보적 부담을 떠안게 할 수도 있고 한국, 미국, 일본의 북한핵대응공조체제나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비군사적 제재가 북한과 같은 폐쇄체제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이미 상당한 영향력을 상실한 러시아나 북한과 체제이념적으로 유사한 사회주의형제국인 중국의 설득을 기대한다는 것도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둘째, UN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비군사적 제재에 있어서도 안전보장이사회참여국가와의

21) 정부의 정책결정이라해서 모두 합리적 정책결정만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케네디대통령의 특별보좌관을 역임한 소렌슨(Theodore C. Sorensen)은 정책결정은 과학이 아니라 기술(art)이며 백악관에서의 정책결정은 합리적인 계산에 의하기 보단 직관적 판단에 의존한다고 술회한 것을 보더라도 이점을 알 수 있다.

Theodore C. Sorensen, *Decision-Making in the White Hous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3), p.10.

공조체제가 여하히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천안문사태이후 인권문제로 그리고 실크워프 미사일의 중동지역 수출로 미국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고 최근에는 지하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는 점등은 공조체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갖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2. 한국의 대 북한핵카드에 대한 대응정책구상

이상으로 새로운 국제질서에 따른 한국의 안보시각이라는 맥락에서 북한의 핵카드에 대한 정책적 의미를 분석해 보았고 이에 입각한 기존의 북한핵카드에 대한 대응정책들을 강경, 온건, 중도입장으로 분류하여 그 내용과 실제 그리고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앞의 분석에 입각하여 정책대안을 나름대로 개진코자 하는 것이다.

첫째, 북한의 핵개발과 보유에 대한 동기적 요인을 제거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기술적, 경제적 능력이 핵확산의 필수적인 요소들이지만 보다 결정적인 것은 동기적 요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²²⁾ 이런 맥락에서 볼때 북한이 핵문제 해결에 성실히 임할 수 있다는 확신이 설 수 있다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독일식의 흡수통일방안이나 팀스피리트 훈련등은²³⁾ 북한핵문제의 진전상황을 주시하면서 탄력적이면서 전향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철수나²⁴⁾ 미국-북한 국교정상화, 일본-북한 수교의 전제조건으로 핵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러시아나 중국의 직접적인 위협은 어느정도 완화되었으나 아직 북한의 재래전력은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고 일본의 재무장이나 군사대국화의 견제세력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은 크며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의 심리적 안정에도 기여한다는데 기인한다.²⁵⁾ 그리고 미국-북한, 일본-북한 수교의 전제조건으로 핵카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이유는 한국이 직접적인 가상 핵피해당사국이며 또 미-북, 일-북 수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제3자적 입장에 서야되고 북한의 입김이 한국의 안보에 영향을 주는 입장이 되는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남북대화등을 통해 상호신뢰의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한간의 핵문제의 발단도 바로 남북이 서로 신뢰할 수 없다는데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주의권의 몰락이후 비참한 동구권의 체제붕괴를 직접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²⁶⁾ 종전까지

22) 어떤 국가가 핵무기를 보유하고자 하는 강한 동기욕구가 있다면 기술적, 경제적인 능력은 그들의 핵무기 획득에 커다란 장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핵확산저지정책은 잠재적 핵보유국들의 기술적 능력만을 통제하는 방법보다는 그들의 핵확산동기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유도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 "제3세계의 핵문제", 『국방논집』, 한국국방연구원, 제17호 (1992 봄), 58면.

23) 한국이 북한에 대해 선택적 유인책 제공이 가능한 영역으로 첫째, 한국정부의 북한방문정책, 둘째, 한·미 팀스피리트 군사훈련 세제, 일본의 대북국교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들고 있다.

래리 A. 닉쉬, "앞의 논문", 62-65면.

24)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도 이런 요구는 수락하지 않을 것이다.

래리 A. 닉쉬, "앞의 논문", 66면.

25)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전술핵이 남침을 억지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거라는 생각으로 국민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

박동환, "앞의 논문", 283면.

26) 대표적인 예로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Nicolae Ceausescu) 정권의 비참한 종말을 들 수 있다.

후견인 노릇을 하던 러시아와 중국이 이제 더 이상 북한체제유지의 믿을만한 보루가 될 수 없다는 생각, 그리고 한국-미국-일본을 중심으로 한 서구진영의 결속이 새로운 국제질서 아래에서 더욱 공고화 되어지면서 북한이 고립되고 있다는 생각들을 북한지도부에 심어 줌으로써 북한을 더욱 위축시키고 급기야는 체제유지를 위해 핵개발이라는 극약처방을 써야만 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였다는 시각에 기인된다. 북한이 핵개발의 명분으로 “자위적 수단…운운” 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피해망상적 사고를 합리적인 사고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신뢰감을 조성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국은 끈기를 가지고 북한을 설득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형태는 남북대화이건 특사교환이건 정상회담을 통해서건 어떠한 형식으로든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핵의 개발이 북한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최상의 방책이 결코 될 수 없음을 주지시켜야 되고 오히려 핵무기 개발로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이 되는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된다는 점과 설혹 어렵사리 핵무기를 개발하여 보유를 한다해도 그것은 한반도 주변국의 핵확산-한국과 일본도 자위적 수단이라는 명분으로 핵개발과 보유를 하게 될것임-을 낳게되어 보다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북한이 핵을 사용하게 되면 보장된 핵보복에 의해 한반도는 초토화되어 버리고 한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자멸케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신뢰기반조성을 위해 이러한 설득과 병행하여 한국 스스로가 군사적 수단을 통한 북한핵 문제 해결이라는 서구진영의 일부 강경책을 완화시키고 핵선제공격을 하지 않겠다는 국제적 천명을 하고 북한과의 경제협력용이를 시사함으로써 북한의 남한에 대한 의구심과 경계심을 풀도록 하는 조치들을 성의껏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번째, 앞에서 언급되었듯 여러가지 유화적 대북정책을 써서 북한으로 하여금 한국에 대한 의구심이나 경계심을 완화내지는 해소시켜 핵개발과 보유에 대한 동기적 요인을 제거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의 유화적이고 진솔한 핵문제해결해법을 북한이 악용할 여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안보란 양보와 협상능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며 최악의 사태에 직면해서는 무력적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²⁷⁾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핵개발의지와 진척정도를 접근가능한 모든 정보원(源)을 통해 분석, 평가하고 이에 입각한 대응전략을 구상하여야 한다. 북한이 한국의 유화정책을 악용하여 시간을 벌고²⁸⁾ 이를 통해 핵무기개발을 도모한다면 한국은 종전과 같은 회피전략에서 과감히 벗어나 북한을 응징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한국-미국-일본의 북한핵대응공조체제를 더욱 공고화하여 북한핵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분명히 천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UN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체제에 대한 대응수순을 밝히나가는 시나리오를 준비하여야 한다. 물론 중국의 거부권행사 가능성과 제재를 결의했다해도 경제적 제재와 같은 비군사적 제재가 어느정도 효험을 볼지는 미지수이기는 하나 이러한 압력이 북한으로 하여금 심리적 압박효과를 갖게하는데는 도움이 될 것임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병행해 북한의 국지적 혹은 전면적인 남침에 대비해 방위전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27) 1960년대 초에 있었던 쿠바사태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다.

Graham T. Allison, *Essence of Decision: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Boston, Mass.: Little, Brown and Company, 1971) 참고.

28) 반대입장에서 생각하면 한국은 시간이 별로 없게 된다. 닉쉬는 1993년 말까지 북한핵문제가 외교적으로 성공해야만 한다고 단정짓고 있다.

래리 A. 닉쉬, "앞의 논문", 65면.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²⁹⁾ 사실상 북한의 핵무기개발이라는 딜레마적 선택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독으로 남침하는데는 여러가지 어려운 제약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코너에 몰리고 국제적으로 고립이 되어 체제 유지에 대한 위기의식이 고조되면 비이성적 정책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³⁰⁾ 또한 북한의 정책결정체제를 이해한다면 이러한 예측은 충분한 가능성과 타당성을 내포케 되는 것이다.³¹⁾

따라서 한국은 유화적 정책 못지않게 최악의 사태에는 힘으로도 우리의 논리를 관철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북한당국에 심어줌으로써 북한의 모험주의적 도발을³²⁾ 억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위해선 우리의 억지력 제고를 위한 노력에도 관심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제5장 글을 마무리하며

북한의 핵문제는 한국에게는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일 수 밖에 없다. 북한은 핵무기개발에 필요한 3가지 요건을 하나하나 갖추어 나가고 있다. 이미 핵무기제조를 위한 플루토늄이나 농축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핵뇌관구실을 하는 기폭장치의 실험을 수십 회에 걸쳐 실시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핵탄두를 목표지까지 이동시킬 수 있는 미사일을 이미 개발하여 실전배치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³³⁾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여유시간이 한국에게는 그리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국제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유화적 제

29) Charles Krauthammer, *op. cit.*, pp.23-33.

30) 고어(William J. Gore)는 정책결정이란 감성적이고 주관적이며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의 감성이나 심리에 합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말은 정책결정은 비록 그 과정이 비합리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책결정에 관련되는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라면 잘된 결정이라는 것으로 정책결정자들의 주관적인 만족도는 곧 정책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William J. Gore, *Administrative Decision Making: A Heuristic Model*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1964), pp.12-13.

31) 북한체제의 지도자들이 비이성적인 정책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는 그들의 성격(personality)을 연구해 보면 어느정도 이해가 간다.

김일성의 성격적 특징은 불신뢰성(의심많음), 생명경시심리, 자기도취, 이중성격 등이고 김정일은 중오심리, 열등의식, 잔인성, 낭비성과 방탕성등을 들 수 있다.

홍성후, "앞의 논문", 93-98면.

32) 이성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개인의 권력욕에 어두워 주관적 의지를 앞세워 해결하려는 정치지도자는 합리성에서 이탈된 정책을 추구하기 마련이다. 대표적 예로 히틀러(Adolf Hitler)의 정책은 이상을 상실한 비합리적, 감성적인 것이었고 1962년 10월에 발생했던 쿠바미사일위기의시 호루시초프(N. Khrushchev)의 결정도 그러한 예이다.

William L. Shirer, *The Rise and Fall of the Third Reich* (Greenwich, CT.: Fawcett Books, 1959), pp.1040-1220.

John Toland, *Adolf Hitler* (New York: Ballantine Books, 1976), p.740.

Robert F. Kennedy, *Thirteen Days* (New York: The New American Library, Inc., 1969), p.86.

James G. Blight, et al., "The Cuban Missile Crisis Revisited", *Foreign Affairs*, Vol. 66, No. 1 (1987), pp.170-188.

김형렬, 『정책학』, (서울:법문사, 1990), 289-290면에서 재인용.

33) 국방부, 『국방백서』, 1993, 참고.

조선일보, 1993. 10. 31.

전병완, "북한의 핵무기 개발능력 및 전망", 『국방논집』, 제13호 (1991 봄), 200-201면.

스츄어와 적극적 대응전략을 병행하면서 북한의 핵무기개발과 보유를 위한 노력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진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 신질서 아래에서도 한국과 북한은 같은 민족이며 2000년대 통일한국의 위업을 이루어 나갈 주체라는 자아의식을 버려서는 안된다. 다가오는 미래에는 근대화된 중국과 재무장된 일본이 통일한국의 제일의 가상적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이다. 따라서 장기적 안목에서 통일한국의 위상을 제고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북한핵의 해결방법 모색에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000년대 도래할 통일한국의 위상을 가다듬으며 바로 그러한 위업의 주체로써 한국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 낙관도 비관함도 없이 현사태의 흐름을 냉정히 추적, 분석, 평가하고 그에 따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 가장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시의성있고 적실성있는 정책대안을 강구해 나가는데 국민의 참된 지혜를 모아 나가야 될 것이다.

참고문헌 (Bibliography)

- 게리트 공(Gerrit W. Gong), “신데탕트시대의 미국의 세계전략”, 『신데탕트와 한반도안보』, 서울:대영사, 1990.
- 국방부, 『국방백서』, 1993.
- 김부기, “페레스트로이카의 배경과 과제”, 『국제정치논총』, 제29집 제2호(1989).
- 김웅, “제3세계의 핵문제”, 『국방논집』, 한국국방연구원, 제17호(1992 봄).
- 김형렬, 『정책학』, 서울:법문사, 1990.
- 래리 A. 닉쉬, “대북(對北) 최단기적 방안:미국의 시각”, 『탈냉전시대의 한미관계』, 서울:한국국방연구원, 1992.
- 로버트 마틴(Robert Martin), “세계적 신데탕트:역사적 시각”, 『신데탕트와 한반도안보』, 서울:대영사, 1990.
- 마코토 모모이, “아시아-태평양 안보환경과 일본의 시각”, 『탈냉전시대의 한미관계』, 서울:한국국방연구원, 1992.
- 미하일 고르바초프, “사회주의사상과 혁명적 페레스트로이카”, 푸라우다, 1989. 11. 26., 『사상과 정책』, 제7권 제1호, 서울:경향신문사, 1990.
- 박동환, “남북군사협상과 한미안보협력의 방향”, 『신데탕트와 한반도안보』, 서울:대영사, 1990.
- 박재규, “새로운 세계질서와 한반도의 위상”, 『전환기의 위상』, 서울:나남, 1992.
- 윌리엄 J. 테일러, 마이클 메이저, “걸프전:한국을 위한 교훈”, 『탈냉전시대의 한미관계』, 서울:한국국방연구원, 1992.
- 伊豆見元, “일본의 국방정책과 동북아안보”, 『신데탕트와 한반도안보』, 서울:대영사, 1990.
- 전병완, “북한의 핵무기개발능력 및 전망”, 『국방논집』, 제13호(1991 봄).
- 조선일보, 1993. 10. 31.
- 차영구, 김창수, “탈냉전시대의 한·미안보관계:한국측 시각”, 『탈냉전시대의 한미관계』, 서울:한국국방연구원, 1992.
- 최평길, 『미리보는 코리아 2000』, 서울:도서출판 장원, 1993.
- 홍성후, “북한지도자들의 성격분석과 북한의 핵개발정책”, 『국방논집』, 제17호 (1992 봄).

- Aganbegyan, Abel, *Inside Perestroika: The Future of the Soviet Economy*, New York: Perennial Library, 1989.
- Allison, Graham T., *Essence of Decision: Explaining the Cuban Missile Crisis*, Boston, Mass.: Little, Brown and Company, 1971.
- Blight, James G. et al., "The Cuban Missile Crisis Revisited", *Foreign Affairs*, Vol. 66, No. 1, 1987.
- Craib, Ian, *Modern Social Theory: From Parsons to Habermas*, London: Wheatsheaf, 1992.
- Dawisha, Karen, *Eastern Europe, Gorbachev, and Reform: The Great Challen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 Desai, Padama, *Perestroika in Perspectiv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 Dubey, Muchkund, "Deterrence Masks Superpower Hegemony",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Vol. 41, No. 2, Feb 1985.
- Friedman, George and Meredith Lebard, *The Coming War with Japan*,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1.
- Gorbachev, Mikhail, *Perestroika: New Thinking for Our Country and the World*, New York: Harper and Row, 1987.
- _____, "Speech at the Congress of the RSFSR People's Deputies, May 24, 1990", *Pravda*, May 25, 1990.
- Gore, William J., *Administrative Decision Making: A Heuristic Model*,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1964.
- Hough, Jerry, *Russia and the West: Gorbachev and the Politics of Reform*, New 2nd Edition, New York: A Touchstone Book, 1990.
- Huntington, Samuel P., "America's Changing Strategic Interest", *Survival*, Jan/Feb, 1991.
- Kennedy, Paul, *Preparing for the Twenty-First Century*, New York: Random House, 1993.
- Kennedy, Robert F., *Thirteen Days*, New York: The New American Library, Inc., 1969.
- Krauthammer, Charles, "The Unipolar Moment", *Foreign Affairs*, Vol. 70, No. 1, 1991.
- Lewin, Moshe, "Perestroika: A New Historical Stage",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42, No. 2, Spring 1989.
- Rosecrance, Richard, *The Rise of the Trading State*, New York: Basic Books, Inc., 1986.
- _____, and Arthur Stein, "Interdependence: Myth or Reality", *World Politics*, July 1973.
- Schaller, Michael, *The American Occupation of Japa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85.
- Shirer, William L., *The Rise and Fall of the Third Reich*, Greenwich, CT.:

- Fawcett Books, 1959.
- Sorensen, Theodore C., *Decision-Making in the White Hous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3.
- Spector, Leonard S., *Going Nuclear*, Cambridge, Mass.: Ballinger, 1987.
- Stewart, Michael, *The Age of Interdependence*, Cambridge, Mass.: MIT University Press, 1984.
- Subrahmanyam, K., "The Nuclear Issue and International Security",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Vol. 33, No. 2, Feb 1977.
- Toland, John, *Adolf Hitler*, New York: Ballantine Books, 1976.
- Waltz, Kenneth, "The Myth of National Interdependence" in Charles Kindleberger (ed.), *The International Corporation*, Cambridge, Mass.: MIT University Press, 1970.